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8대 인권 의제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7백만 명이 넘는 이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적인 운동조직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 인권 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2017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4.0 국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내 허가 안내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www.amnesty.org
국제앰네스티 이외의 저작권자가 표시된 자료의 경우 이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습니다.

2017년 초판 발행

국제앰네스티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K

문서번호: ASA 25/5785/2017

원문언어: 영어

amnesty.org

amnesty.or.kr

표지사진: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시위 도중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당하고 끝내 숨졌다. 그로부터 1년 후, 시위대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

©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1.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1
2. 표현의 자유 보장.....	2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3
4.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4
6.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6
7.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7
8. 사형제 폐지	8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은 국제 인권 의무를 다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주요 인권 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LGBTI) 커뮤니티, 북한 등지 출신의 비호신청자의 인권 역시 부정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전부터 그 이후로까지 이어진 수백만 명의 거리 시위는 많은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창하는 것에 시급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상화하고 인권의 향유를 가로막는 중대한 결점들의 해결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이다.

1.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를 규율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등 여타 국내법과 경찰의 관행은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 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특정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데 있어 당국이 가지는 폭넓은 재량권 등은 모두 집회 주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요소다. 이와 더불어 집회 과정에서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결여는 한국 정부의 국제 인권 의무에 배치되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법집행공무원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부족하다는 점뿐 아니라 관련 현행법, 지침, 관행의 미비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5년 11월 14일, 대규모 시위 도중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당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당히 지체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시위 참여자 3명이 병원에 후송된 직후 사망한 사건은 경찰의 집회 관리 관행에 대한 검토와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 방한 후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집행과 국제인권법기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련의 상충되는 부분과 간극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¹

1. 법률체계가 다수 핵심영역에서 국제인권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2. 법률체계가 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점
3. 그러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도 집회 및 결사의 권리를 존중·보호·촉진할 의무에 충분한 주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¹ 마이냐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보고서, 유엔 문서번호 A/HRC/32/36/Add.2, 2016년 6월 15일 (이하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보고서”), para 90.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긴급성을 가진 사안으로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물대포의 사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법집행공무원과 그 상급자를 지체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물대포 사용 관련 현행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도록 할 것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하고, 특히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법에 명문화할 것
- 집회 관리의 전반적 접근방식을 평화적 집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법규가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이 그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도록 보장할 것
-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촉진할 정부 당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인 집시법 개정예 착수할 것

2.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금과 기소는 북한을 “이롭게”한다고 간주되는 자료를 출판하고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을 겁주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검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돼 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단지 적국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적국에 대한 동조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² 는 점을 재차 지적한 바 있다.

지난 4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사건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당원 6명에 대한 기소 및 수감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에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에서 특정 정당을 해산하는 결정은 1958년 정당 강제해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히 위험한 징후라 할 수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 중에는 지금은 해산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회원들과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는 이진영 씨도 포함되어 있다.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문서번호 CCPR/C/KOR/CO/4, 2015년 12월 3일.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여 한국의 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괴롭힘이나 의사 표현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만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2016년 말 기준 4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법상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가장 많이 수감된 나라이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극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2012 ~2015년 사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소원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에 있다.

2015년 초부터 2017년 2월 사이 일선 지방법원에서 병역거부자 17명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있었지만, 검찰의 항소로 최소 두 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번복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과 기록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 이중으로 처벌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 문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결부되어 복합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유관기관 다수는 전과 기록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채용하지 않고 주요 사기업들도 대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들의 병역 사항 기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하고, 향후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지 말 것
- 양심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것
-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각 개인이 병역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완전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와 여타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뷰한 이주노동자 중 최소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³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에 있어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농축산분야 등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종의 징벌(해고, 비자 갱신 거부, 폭력 위협 등)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하도록 강요받으며 결과적으로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있다.⁴ 상당수의 농축산 분야 이주노동자가 강제노동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당했다. 한국에서 인신매매는 형사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는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더 큰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비자 연장/갱신 신청이 제한 또는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행 법을 개정할 것
-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등에 대한 권리가 노동 분야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다음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고 그 이행을 보장할 것: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3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 2013년 10월, 111, 186-187, 190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BB2013103111262611332591.pdf 2014년 6월 3일접속 (한국어)

4 국제앰네스티,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 문서번호: ASA25/004/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004/2014/en/>

5. 비호신청자와 난민 보호

한국 정부는 2014년에 시리아 비호신청자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해 이들이 시리아 내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결정한바 있음에도 2016년에 시리아인 28명을 수개월간 인천공항에 구금했다. 이는 한국이 난민과 비호신청자에 대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난민과 비호신청자들을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난민 위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난민 인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시리아 출신 비호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만 부여하는 현재 방침을 넘어서서 난민 인정에 대한 전반적 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비호신청자가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금이 정당한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접근권과 의료 조치를 받을 권리, 인도적인 구금환경을 보장할 것
- 유엔난민기구(UNHCR)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 분담 시스템에 동참할 것
-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6.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이산가족, 강제실종, 북한이탈주민 등 수많은 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의 주요한 특징이다. 한국 대통령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문제를 북한 당국에 제기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남북 간의 대화는 대부분이 안보 문제에 집중돼 있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교류 역시 중단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한국이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과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2016년 탈북한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구금한 사실도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절차의 적법성에 의구심을 품게 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이탈주민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

월까지 구금돼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사회 적응을 위해 12주간 하나원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다. 북한이 탈주민은 이같이 장기간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과 접견할 수 없으며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된다. 이는 1988년에 채택된 유엔 모든 형태의 구금 또는 수감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집 제15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동 원칙은 “피구금자 또는 수감 중인 사람의 외부와의 소통, 특히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연락은 수일 이상 차단해서는 안 된다.”⁵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들에 다음의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향후 남북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할 것
- 북한이탈주민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구금은 가능한 최단기간 내로 제한하고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또, 특히 구금 및 신문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이 선택하는 변호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 구금 시설 외부에 있는 이들과의 접촉이 즉각적으로 허용되고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7.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한국 정부는 2011년과 2014년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 종식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2016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독립전문가 직위를 신설하는 데도 찬성했다. 이와 같이 국제적 문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자국 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인터섹슈얼(LGBTI)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에는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성소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에는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법인 설립이 불허됐고, 같은 해 5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쿼어퍼레이드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으나 법원이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공영방송인 KBS의 조우석 이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동성애자를 “더러운 좌파”라 칭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⁶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심의에서 성소수자를 상대로 한 계속되는 광범위한 폭력과 혐오 발언을 언급했다.⁷

현재까지 한국에는 인권 보호의 범위를 성소수자 공동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할 유의미하고 이행강제력을 가진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군형법에서는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관계

5 유엔 문서번호 A/RES/43/173, 1988년 12월 9일, 제19원칙 및 이하 내용도 참조할 것. ▲ 강제실종 협약 제17조 제2항 제D호 ▲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2015, 벨스만델라 규칙) 규칙 제43(3)호 및 제58호 ▲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0호(제7조), para 11 유엔 문서번호 HRI/GEN/1/Rev.1, 1994년 7월 29일, p30

6 경향신문, “KBS 이사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2015년 10월 8일

7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유엔 문서번호 CCPR/C/KOR/CO/4, 2015년 12월 3일.

조차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⁸ 모든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한국에서 게이 남성은 군복무 기간 동안 폭력, 괴롭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막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성소수자 공동체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추진할 것
- 민족, 성별, 실재나 외견상 보이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혐오 발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독립전문가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8. 사형제 폐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1997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사형 선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사형수는 모두 61명이다. 2016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는 압도적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향하는 첫 단계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을 촉구하는 6번째 결의안이 채택되었다.⁹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사형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사형폐지 법안이 2015년 유인태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한때 사형수였던 그는 그 전에도 사형폐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모두 7번이다. 이번 사형폐지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298명 중 172명의 지지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다 폐기됐다. 그 이후 사형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 후보들에 다음의 사항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법적 폐지를 이끌어 낼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하도록 추진할 것

8 군형법 제92조의 6

9 사형집행모라토리엄, 유엔 문서번호 A/RES/71/187, 2016년 12월 19일.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17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40개국이 반대, 31개국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적인
인권운동조직입니다.
한 사람이 겪는 불의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연락처



issue@amnesty.or.kr



+82 (0)2 730 4755

소셜네트워크



facebook.com/AmnestyKorea



[@AmnestyKorea](https://twitter.com/AmnestyKorea)

대통령 후보자에게 보내는 8대 인권 의제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주요 인권 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LGBTI) 커뮤니티, 북한 등지 출신의 비호신청자의 인권 역시 부정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상화하고 인권의 향유를 가로막는 중대한 결점들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 증진하고, 한국의 국제 인권 의무를 다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